

투데이 칼럼

북한 핵무기 역사(2)

미국은 지난 1994년 10월 북한과 제네바 협약을 했다. 당시 소련은 이미 붕괴됐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세력은 없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것도 미국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당시도 연평해전, 동해 잠수함 침투,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대남 도발을 했다. 핵무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던 중 미국이 북한의 핵을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이다.

9.11 이전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을 '핵확산의 문제'로 보았다. 북한의 핵이 아랍권 국가들에게 확산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9.11 이후 북한 핵 문제를 '테러리즘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돈이 풍부한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핵폭탄을 판매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미국은 당장 핵 테러의 위협에 당면할 판이었다.

북한에 단 한 발의 핵폭탄 보유조차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법을 통해 핵개발을 시도한다는 정보도 있었다.

지난 2002년 10월 미국 특사 켈리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미국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특사와 북한 대표 간에 격한 논쟁이 있었다.

이후 북한은 켈리 일행에게 '우라늄 농축 핵 개발은 물론 더 무서운 것도 가지고 있다'며 소리쳤다. 이날의 소동은 2주일 후에 한미 양국에 의해 동시에 공개 되었다.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 핵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지지하자는 목적으로 6자 회담 등을 했다. 그러나 효력이 없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약화되지 않았다.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상대한 나라들은 세계 4대 강국인 미, 일, 중, 러 등이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다.

다섯 나라가 진정 북한 핵을 저지시킬 마음이 있어 합심 노력했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핵을 개발했다. 그들은 북한이 살길은 개혁, 개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개혁과 개방이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핵폭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는 파탄이 나도 군사력은 막강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 핵의 성격은 '국가안보'가 아니다.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타락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Regime Change)라는 정책 수단을 생각해 왔다.

문제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한국을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만든

다는 점이다. 불리한 상황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북한 핵을 무력화 시키거나 억지하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개발된 핵전략 이론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궁극적인 해답이다. 이스라엘처럼 선제 공격을 각오할 수 없는 한 독자 핵무장은 우리의 최선의 방안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국의 북한 정책은 유화 혹은 햇볕정책이었다. 북한의 단발마적 저항, 즉 전쟁 도발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단발마적인 도발 수단 중 핵무기가 포함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려는 어떤 정책의 시행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우위 상황의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문자 그대로 절대병기(absolute weapon)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와의 대결에서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대남 우위를 확보해 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설

도내 보리 판로 문제

전북 도내 보리 생산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외면당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요즘 누렇게 익은 보리밭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그러나 판로 때문에 농부의 마음은 편치 않다. 농협중앙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수매해주는 물량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판로를 찾지 못한 70% 정도는 민간업체에 저가에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농협 가격보다 40%로 그램 한 포대에 1만 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농민의 수익은 바닥 수준인 것이다. 필자 당 겨우 40~50만 원 수익이 날 정도다. 보리 수요가 줄자 2011년 정부 수매가 폐지됐고 보리는 소외되기 시작했다.

식생활이 다양화되면서 당연히 보리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보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격 하락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주는 곳이 없다며 수확을 포기하려는 농민들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울 보리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수요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 면적인 3만 5000ha보다 1000ha가량이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농협에서도 계약재배 물량 외에는 더 이상 사들이지 않는다. 농민들은 농협에서 수매량을 늘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농협에서도 판로가 확실치 않다. 지난해 재고도 처리하지 못한 곳이 있다.

추가 수매는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도 수매를 해도 판매할 곳이 없어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할 판이다.

가능성 품종 개발이나 보리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건강식품으로서 보리의 가능성이 우수한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대 요구된다.

생산량 조절이나 수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 보리 수급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도에 맞춰 전라북도가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은 7명이다.

전 전라북도 정부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 감제경찰서장이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경찰(중앙경찰)은 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은 생활,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과 이동·청소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같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주는 것이다.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전라북도는 이미 6월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운영을 하면서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 제도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원회 구성이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 적어도 여성 2명 이상 구성해야 하는 법률을 무시했다. 위원 가운데 인권 전문가가 없는 점도 문제다.

위원회 구성이 인권보호와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전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와 관련된 추경 예산 4억 4000만 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당장 이미 시작된 자치경찰 시범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구성 및 운영비에 대한 뒷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우려가 크다. 자치경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독자제언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령 준수는 기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 이하 PM)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면서 관련 법령도 여기에 맞춰 정비 되고 생활 속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 갔다.

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8년엔 225건, '19년 447건, '20년엔 897건으로 매 년 두 배 이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 지식백과)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층에서의 관심과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서상 이런 PM에 대한 적절한 규제 또한 절실하다는 여론도 함께 커져 오던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처럼 신체를 완전히 외부에 노출한 상태에서 일정한 원동기 동작에 의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는 편리성을 주고 있는 반면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음이 현실이라 하겠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PM이용이 생활화 되어 있는 만큼 이용 주민의 우선적 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수칙과 필수 규정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면서도 밀도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안전수칙면에 있어서는 해당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의미)의 취득을 비롯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통행,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동승 금지, 야간 등화·발광장치 작동,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겠다.

최근 들어서도 PM과 일반 차량과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 현장을 종종 목격되곤 한다.

경미한 물적피해 사고라 하더라도 PM운전자 면허 없이 운행을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중요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로 정식적인 교통사고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이용해야 한다.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PM 이용 시 반드시 사전에 면허 취득 후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에서도 대학

교가 위치한 지역 특성을 감안 자체 전단지를 제작 1:1식 실질적 홍보활동을 통해 법령준수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집중 계도 활동을 거쳐 주요 항목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편리함으로 접하게 되는 이동수단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범칙금 부과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PM이용은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법령 준수에서부터 출발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송태석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장경감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